2022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 공 채 (순 경)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과목별 코드번호
※ 시험 과목 - 필수 : 해양경찰학개론(01), 형사법(12) - 선택 : 해사법규(04), 헌법(05)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보기>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상륙 종류에 따른 허가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외국인 승무원이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때 – ( )일 이내
㉢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하고자 하는 때 – ( )일 이내

① 33　② 48　③ 63　④ 75

2.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조거점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④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4. 다음 <보기>는 「국가재정법」상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 )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
② 각 중앙관서의 장, 국회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④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

5. 다음 <보기>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 겸직 금지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법령준수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 엄수의 의무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6. 다음 <보기> 중 수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중요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범행 발생 전후를 고려하여 범죄혐의자가 그 시간까지 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거나 또는 범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을 경우는 절대적 알리바이에 해당한다.
㉢ 피의자의 사투리는 지리감이다.
㉣ 지리감은 연고감에 비하면 수사대상도 많고 수사범위도 넓다.

① ㉠, ㉡　② ㉠, ㉢　③ ㉢, ㉣　④ ㉡, ㉢

7.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　② 「공직자윤리법」
③ 「경찰공무원법」　④ 「공무원연금법」

8.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법」과 「해양경비법」의 목적을 서술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해양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 )을/를 수호하고 ( )와/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경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 )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안보 – 해양안전 – 해양주권
② 해양안보 – 해양주권 – 해양안보
③ 해양주권 – 해양안전 – 해양안보
④ 해양주권 – 해양안보 – 해양안전

9.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는 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② 국방부
③ 경찰청 ④ 해양경찰청

10.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상 일일근무 지정 관련,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이 지역의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②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③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④ 관할 해안선, 해역 및 교통, 국가중요시설 등

11. 다음 <보기>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상 위험예보제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위험예보제"란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 )", "( )", "( )"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관심 ② 주의보 ③ 심각 ④ 경보

12.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점거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청은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불법적으로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3. 다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상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
④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14.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의 직접적인 소관법률을 나열한 것이다. 그 제정시기를 시간적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5.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기상특보 중 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6. 다음 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처분”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정비·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③ “관리”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7. 다음 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포함)」 상 연안교통관제센터가 위치한 곳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안 ② 진도 ③ 통영 ④ 군산

18.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색(Red)수배서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Green)수배서 - 신종 수법 공유
③ 흑색(Black)수배서 - 사망자, 변사자 신원확인
④ 청색(Blue)수배서 - 국제정보조회수배서, 수배자 소재·신원 파악

19. 다음 중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북태평양 해양경찰회의(NPCGF : North Pacific Coast Guard Forum) 가입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② 싱가폴 ③ 캐나다 ④ 러시아

20. 다음 중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상 <보기>의 설명과 관련있는 방제대책기구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지속성 기름이 10㎘ 이상 50㎘ 미만(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100㎘ 이상 300㎘ 미만)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방제대책반
② 지역방제대책본부
③ 광역방제대책본부
④ 중앙방제대책본부

형사법

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②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아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④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아무런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
② 甲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甲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고 2백미터쯤 오다가 다시 1회 간음한 경우, 두 번째의 간음행위는 처음 한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4. 다음 중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에는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불을 놓아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①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③ 甲이 권한 없이 A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가 성립한다.

6. 다음 <보기> 중 「형법」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누범 가중
㉢ 경합범 가중
㉣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법률상 감경
㉥ 정상참작감경

① ㉠-㉡-㉢-㉣-㉤-㉥
② ㉠-㉣-㉡-㉤-㉢-㉥
③ ㉡-㉠-㉣-㉢-㉤-㉥
④ ㉢-㉡-㉠-㉣-㉥-㉤

7. 다음 중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③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별도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성호의 선장인 피고인이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선박의 조난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닻줄의 길이를 7샤클로 묘박하였는데 선박이 태풍에 밀려 양식장에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② 의사인 피고인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임부의 승낙을 받아 부득이 낙태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임부는 사망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빌려준 약속어음을 피해자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자 피고인이 타인이 소지하는 어음을 뺏어 이를 찢어버린 경우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경찰관인 피고인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다가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뒤따라 추격하면서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9.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다.
② 부작위에 의한 교사와 방조 모두 불가능하다.
③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④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10. 다음 중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② 피고인은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

④ 피고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증거공통의 원칙상 피고인의 증거동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이른 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인 유리컵에서 지문을 채취한 후, 그 유리컵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채취된 지문도 위법수집증거이다.

12. 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로 A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마침 A의 옷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장차 사체가 발견될 때 A의 신원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두었다. 그로부터 15시간 가량 지난 후인 그 다음 날 10:00경 범행 현장에 다시 와서 A의 사체를 인근 공사장 창고에 버리고, 지갑 속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하였다.

① 채무면탈 목적으로 A를 살해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지갑속의 돈을 꺼내어 담뱃값으로 사용한 행위는 살인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A의 사체가 발견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 차량의 사물함에 통째로 넣어 두는 행위에 대하여 甲에게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A의 사체를 공사장 창고에 버리는 행위는 사체유기죄에 해당하며, 사체유기죄는 살인행위 등으로 성립될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13. 다음 중 「형법」 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이다.

②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③ 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모두 친고죄이다.

④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14. 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③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④ 가석방의 요건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15.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한 영장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수회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야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하나,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6. 다음 중 원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행목격자의 공판정에서의 증언
②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③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
④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

17. 다음 중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가 아닌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나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④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18. 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父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O) ㉡(O) ㉢(O)
② ㉠(O) ㉡(O) ㉢(X)
③ ㉠(O) ㉡(X) ㉢(X)
④ ㉠(X) ㉡(X) ㉢(O)

19. 다음 <보기>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20. 다음 중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정신지체자인 자신의 여동생 乙을 丙이 놀리면서 성적인 희롱을 하자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머리를 각목으로 후려쳤다(제1행위). 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甲은 丙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없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방파제에서 丙을 바다로 던졌다(제2행위). 그 결과 丙은 익사하였다.

㉠ 개괄적 고의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제2행위에 대하여도 제1행위의 고의가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행위이기 때문에 살인기수이다.

㉡ 미수범설에 의하면 고의의 행위시존재원칙에 따라 제1행위에 대한 살인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치사가 성립되고 양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될 수 있다.

㉢ 甲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丙을 바다로 던졌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제1행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제2행위),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사법규

1. 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 안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　　)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 정박　㉡ 2　㉢ 20
② ㉠ 정류　㉡ 2　㉢ 100
③ ㉠ 정류　㉡ 2　㉢ 20
④ ㉠ 정류　㉡ 3　㉢ 20

2.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④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 위치가 정해진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③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④ 횡도, 범월갑, 화암추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기점이다.

4. 다음 <보기>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②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
② 해양경찰서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④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

8.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④ 「수산업법」 임대차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9.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운항관리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어항과 어항관리청이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② 지방어항 : 시·도지사
③ 어촌정주어항 : 광역시장, 시장·군수
④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11. 다음 중 「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1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② 흘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을 말한다.

13.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무역항이라고 한다.
②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관리무역항은 경인항, 대산항, 울산항 등 13개 항이고, 지방관리무역항은 태안항, 삼천포항, 제주항 등 18개 항이다.
④ 항만시설용 부지, 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은 지원시설이다.

14. 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4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보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 보기 >

㉠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　) 퍼센트는 소아용)를 갖출 것
㉡ 유선장에 유선이 30척일 때 (　)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단, 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
㉢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
㉣ (　)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출 것
㉤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　)명 이상, 시속 (　)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① 178 ② 188 ③ 197 ④ 198

1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정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이 외국선박을 정선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장광 1회, 단광 1회, 장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를 발신하여야 한다.

17. 다음 <보기>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기 >

㉠ (　　)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　　)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　　) : ㉠~㉢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	㉡	㉢	㉣	㉤
①	정기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항행검사
②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검사	임시검사
③	임시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검사
④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18.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와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위험물이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험화물운반선으로 본다.
㉣ "조종제한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 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보기>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지시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영업시간의 제한	㉡ 운항 횟수의 제한
㉢ 영업의 취소	㉣ 영업의 일시정지
㉤ 승선인원수 제한	㉥ 주기적 위치 보고
㉦ 영업구역의 이전	㉧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의 비치 및 관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조치의무자는 조난선의 선장이다.
② 조난선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난선의 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헌 법

1. 다음 중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③ 민족문화의 창달
④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2. 다음 중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② 정당은 단순한 시민이나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중개적 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기본권이 아니다.

3. 다음 중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 등의 제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필요경비를 수납한 것에 대해 해당 시·도지사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발할 수 있도록 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다음 중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은 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5. 다음 중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집회는 내적 유대뿐만 아니라 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6.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발의하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면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7. 다음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②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8. 다음 중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②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을 위반하였다면 곧바로 그 자체가 위헌이 된다.

③ 기본권제한입법에 있어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명확성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 보완시행지침, 1996.8.7.)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중 국민투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②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③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부의권의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수도를 분할하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계기인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1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연고가 없는 자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2. 다음 중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 보장은 주관적 공권의 보장인 동시에 그 재산권이 존재하는 특정한 공동체의 사유재산제도 보장인 점에서, 사유재산권이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물권·채권은 물론 특별법상의 권리인 광업권·어업권·수렵권 그리고 공법상의 권리인 환매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청구권 등도 포함된다.

④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3. 다음 중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④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4. 다음 중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표현·예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학교교육의 보호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② 초·중·고교 교사는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수 없다.

③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학·교수회·교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다.

④ 대학교수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 아래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란 논문을 제작·반포하거나 발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15. 다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현행 「헌법」상 재산권 보장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④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방법이 설사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③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하여야 한다.
④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원칙의 한 요소인 '수단의 적합성(적절성) 원칙'에 위배된다.

18. 다음 중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제도
② 연좌제 금지
③ 일사부재리 원칙
④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19. 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20.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소주 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